

행정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례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④	①	④	②	②	②	①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③	④	①	③	②	④	②	③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5	재무이론	3
정책이론	4	행정환경	1
조직이론	1	지방자치론	2
인사이론	4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8	생소한 문제	2	100점 방지	0
------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85점 이상

분발대상: 70점 이하

▶ 총평

올해 지방직7급도 올해 국가직7급처럼 7급다운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 즉 오히려 그것을 대비할 시간에 더 많이 출제되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합격할 수 있는 내용, 더 단순하게 말하면 버려야 학격할 수 있는 내용은 A책형 기준 8번, 16번 두 문제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당연히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그것도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급다운 약간의 용융성이 필요한 문제, 즉 실력 있는 수험생 중에서도 반복훈련 정도에 따라 점수가 갈리는 문제로 3, 5, 19 번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20번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결모습만 난해보일 뿐 기출문제의 문장만으로 용융 없이 정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학격하는 방법으로 공부한” 실력 있는 수험생들의 점수가 “반복훈련 정도에 따라” 75~90점 사이에서 갈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에서 조차 결론이 혼동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75 점 미만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공부방향은 잘 잡았으나 아직 절대적인 시 간투자가 부족했던 분들은 앞으로 실력을 만들면 되지만 공부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분들은 해설 강의 들으면서 다시 공부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로만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문제로 해결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에서 일일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문제와 비교해 주니 후자의 경우는 해설 강의를 통해 학격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7급 시험제도 변화 때문에 내년 7급을 대비하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면서 문제를 많이 주셔서 해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직7급 시험 기준 15문제는 9급이든 7급이든 매번 출제되는 출제포인트이니 여기서 많이 틀린 분들은 7급만의 공부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15문제

를 모두 맞은 분들만 7급을 위한 +a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a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①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회복수를 더 늘리고, ②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풀면서 출제포인트는 같지만 결모습이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③ 모의고사로 찾은 구멍을 틀린 문제 및 관련된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내년 7급 행정학 시험문제도 여전히 객관식이기 때문에 출제포인트와 출제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 지금 20문제 중 3문제 정도인 약간의 용융이 필요한 문제가 더 높은 비중으로 나온다고 가정해도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정학 실력을 냉정히 파악하여 “먼저” 해야 할 것과, “그 다음” 해야 할 것을 정하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중대
-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암기용 해설>

-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 신공공관리론

<이해용 해설>

- ① (O), ② (X), ③ (O), ④ (O)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두고 경쟁과 분권화를 강조한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관료제적인 특징을 일부 회복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자율성 부여 및 성과를 통한 책임보다는 국민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중시하고, 정부조직의 분절화보다는 구조적으로 통합된 정부(통 정부)와 정부의 조정능력을 강조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 강한 행정학 144번 관련 틀린 선지(2018 서울9급)]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 ① X-비효율성
-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 ③ 비경합성
- ④ 파생적 외부효과

<암기용 해설>

- ④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개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

<이해용 해설>

- ④ 정부개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파생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사례의 경우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부개입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파생적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예강한행정학 192번(2016 국회8급)]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문 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③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암기용 해설>

-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 **봉급표는 직위별(직종별)로 다름**

<이해용 해설>

- ① (X) 봉급표는 직위별(직종별)로 다르다.

- ② (O)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만 제외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예강한행정학 1220번(2013 서울7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직무등급별로 정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②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용 해설>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회계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님(한정성 원칙 적용)

<이해용 해설>

④ (X)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해진 목적, 규모, 시간 등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니다(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316번(2014 국가7급, 2000 사법고시)]

예산의 원칙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이 원칙 중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 | | |
|--------------|--------------|
| ㄱ. 예산공개의 원칙 | ㄴ. 예산총계주의 원칙 |
| ㄷ. 예산통일의 원칙 | ㄹ. 예산단일의 원칙 |
| ㅁ. 예산한정성의 원칙 | ㅂ. 사전의결의 원칙 |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ip>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가 무작위배정을 바탕으로 한 진실험설계인지 모르더라도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강한행정학)의 기출문제에서 준실험설계라고 나온 단절적 시계열설계 및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진실험을 틀린 선지로 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를 소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준실험

-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 비실험

<이해용 해설>

① (X), ③ (X) 단절적 시계열설계 및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설계이다.

② (O)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통제집단이 있다는 점에서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와 다르다. 이는 무작위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통제집단은 아무리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집단에만 처치를 한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치치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진실험설계이다.

④ (X)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통제집단 없이 실험집단에만 처치를 하고 그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비실험설계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54번(2011 국가7급)]

다음이 설명하는 연구방법은?

준실험설계방법 중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대상을 배정할 때 분명하게 알려진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o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투입자원이 회소하여 오직 대상집단의 일부에게만 회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

- ①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③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Tip 이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구방법들은 준실험 설계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름과 키워드만 매칭시켜 보면 됩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655번(2017 지방7급)]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암기용 해설>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 다원주의 :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설명

<이해용 해설>

- ① (O), ③ (O)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이익집단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합주의는 그 과정에서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국가조합주의, 사회의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조합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X) 다원주의는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는 이론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이익집단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합주의이다.
- ④ (O)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가 없을 순 없다고 보지만, 정책과정에 거의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384번(2009 군무원7급)]

국가권력이론 중 엘리트주의를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다양한 이익집단간 균형과 조절을 중시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386번(2009 군무원7급)]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암기용 해설>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이슈네트워크

<이해용 해설>

- ① (O), ③ (O)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이에 비해 정책공동체는 전문가집단 등 참여자의 범위가 더 넓다.
- ② (X) 하위정부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과 같은 모형이다.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모형은 미국이 다문화되면서 등장한 이슈네트워크이다.
- ④ (O)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참여자로 제한하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며 서로 경쟁하는 이슈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406번(2013 경경승진, 2005 국가7급)]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의회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 ④ 이슈네트워크는 Hecll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문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용이해졌다고 주장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8. 「국가공무원법」 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중여를 받았다.

<Tip>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을 끌린 선지로는 많이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진 못하더라도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예강한행정학)의 기출문제에 있는 선지 ②, ③은 소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 ▶ 직무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 불가

<이해용 해설>

- ① (X)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할 수 없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9.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암기용 해설>

-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배정·집행 불가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 준예산

-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유

<이해용 해설>

- ① (X)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② (X)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하는 것은 준예산이다.

- ③ (O), ④ (X) 전쟁 및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유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예강한행정학 1354번(2015 서울9급)]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폐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ㄱ ㄴ ㄷ

- | | | |
|---------|---------|-----------|
| ① 강제배분법 | 산출기록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 ② 강제선택법 | 주기적 검사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 ③ 강제선택법 | 산출기록법 | 행태관찰척도법 |
| ④ 강제배분법 | 주기적 검사법 | 행태관찰척도법 |

<암기용 해설>

- ㄱ.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 : **강제배분법**
- ㄴ. 소요시간 대비 업무량 측정 : **산출기록법**
- ㄷ. 과업 행태를 등급화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이해용 해설>

- ㄱ. 폐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 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 대비 업무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산출기록법이다.
- ㄷ. 직무분석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과업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 행태를 등급화하는 방법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55번(2019 국가9급, 2019, 2016 서울9급)]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 ① 강제배분법

[기출에강한행정학 1153번(2013 교행9급, 2008 선관위9급)]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 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상

문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정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실태 이전보다 훨씬 낫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의 수질 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 ① 역사요인

- ② 겸사요인

- ③ 선발요인

- ④ 상실요인

<암기용 해설>

- ① 역사요인 : 정책이 아닌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용 해설>

- ① 역사요인은 정책이 아닌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내적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사례의 경우 폐수정화시설 의무화 정책뿐만 아니라 불경기로 인한 공장 폐업과 오염 수준 측정 직전의 비라는 우연한 사건이 하천 오염 정도를 줄이는 경쟁가설(제3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역사요인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44번(2016 국가9급, 2015 국회8급)]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 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③ 역사요인(history)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2. 부폐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부폐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② 부폐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③ 부폐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④ 부폐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암기용 해설>

② 부폐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체계적 접근

③ 부폐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법제도적 접근

④ 부폐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 사회문화적 접근

<이해용 해설>

① (O) 부폐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은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부폐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X) 부폐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체계적 접근이다.

③ (X) 부폐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법제도적 접근이다.

④ (X) 부폐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예강한행정학 1258번(2015 국가7급, 2009 지방7급, 2007 국가7급)]
공무원 부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폐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부폐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공무원 부폐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폐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폐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 ④ 음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암기용 해설>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 프리드리히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파이너

④ 음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부 소속

<이해용 해설>

① (X) 관료가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율적(내재적)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조한 학자는 프리드리히(Friedrich)이다.

② (X) 외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관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의 제도적(외재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 학자는 파이너(Finer)이다.

③ (O)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제를 말하고 외부통제는 행정부 외부의 주체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는 행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이다.

④ (X) 우리나라의 음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형 음부즈만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예강한행정학 1567번(2013 해경간부)]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H.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은 사법부·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다.
- ③ C.J.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은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기출예강한행정학 1610번(2006 서울9급)]

우리나라 음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부통제수단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암기용 해설>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요인(효율성 증가 요인)

<이해용 해설>

- ① (O), ② (O), ③ (O)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등으로 인해 잘못된 대리인을 역선택하거나 선택된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 ④ (X)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대리인의 존재는 기존의 대리인이 교체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96번(2013 해경간부, 2011 국회9급)]

대리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며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불균형, 불확실성 그리고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에 대한 역할을 중시한다.
- ⑤ 이기적 인간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 ② 테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 매트릭스 조직 : 이원적 권한체계 ⇒ 명령통일의 원리 위반

<이해용 해설>

- ① (X)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를 결합한 이원적 권한체계를 가지는 조직으로, 한 명의 상관만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반된다.
- ④ (O) 네트워크 조직은 중심조직은 핵심업무만 수행하고 부수적 업무는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조직구조이다. 따라서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외부기관들 간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767번 관련틀린선지(2017 국가(추)9급)]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명확하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 ②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Tip>

「지방자치법」의 모든 규정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도 선지 ③을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법인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출제포인트이니 선지 ①은 당연히 소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 지방의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조합의 결정은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시·도 내 시·군·구 간 조합인 경우는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고, 시·도 간 또는 다른 시·도 내 시·군·구 간 조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선지 ②, ③, ④를 비교해 보면 선지 ③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기용 해설>

-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산한 경우 재산의 처분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이해용 해설>

- ③ (X)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을 구성했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7.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의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의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 포스트모더니즘 : 이성·합리성·과학을 부정

<이해용 해설>

- ① (O) 포스트모더니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하는 타자성을 강조하였다.
- ② (X)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목표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찾는 이성·합리성·과학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는 전리를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서 타자성, 해체, 상상, 영역파괴를 강조한다.
- ③ (O)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영역 구분을 파괴하는 영역파괴(탈영역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O)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과 설화를 해체하여 그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을 강조한다. 행정에서도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시켜야 행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7번(2008 지방7급)]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구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77번 관련불린선지(2017 행정사)]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 과학주의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암기용 해설>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비목 설치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필요

<이해용 해설>

④ (X)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08번(2016 국가9급)]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암기용 해설>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 :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

<이해용 해설>

① (O)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강조하는 조직의 배태성이란 조직이 사회문화적 환경을 내포(매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에 따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X)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이다.

③ (O), ④ (O)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제도적 동형화를 강조한다. 동형화의 유형에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기업들이 따르는 것처럼 외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는 강압적 동형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다른 제도를 모방하는 모방적 동형화,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제도가 도입되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89번(2014 국회8급)]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기출에강한행정학 94번(2017 지방9급)]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문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지방비 70%)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 ③ 이 사례에서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

<Tip>

이 문제는 결모습만 난해해 보일 뿐 그냥 '국고보조금'의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전 출제됐던 선지 ③에 있는 국고보조금의 효과를 알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모습은 난이도 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입니다. 선지 ③ 외의 내용은 모두 무시해도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③ 국고보조금의 효과 : 지역 간 발생하는 외부효과 시정,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 달성

<이해용 해설>

- ③ 국고보조금은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는 여러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861번(2009 군무원7급)]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②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④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